

장애인 인권침해 법인 이사 전원 교체

광주시는 23일 장애인 인권침해와 보조금 횡령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회복지법인 가교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을 비롯해 이사 7명 모두를 교체하는 등 정상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법인 가교 임시이사회는 최근 대표이사를 비롯해 이사 3인을 해임 의결했다. 광주시는 임시이사 3인을 추가 선임해 기존 이사 7인을 전부 교체했다.

임시이사회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횡령현 원장을 법인 임시 대표

광주시, 전 대표이사 해임 등 7인 모두 교체 외부이사 증원·연임제한 등 개선책 마련

이사로 선출하고 법인출연자(대표이사) 해임에 따른 제3차 법인 사유화를 막기 위해 이사 정수를 7인에서 9인으로 확대했다.

또 1회에 한해서만 연임이 가능하도록 연임제한 규정을 도입하고 외부 추천이사 비율도 정수의 3분의 1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상향조정하

는 등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앞서 광주시는 대표이사회의 결의 등으로 운영이 불가능한 사회복지법인 가교의 정상화를 위해 지난 4월부터 관련 공무원, 지방의원, 변호사, 교수, 시민단체 대표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대책회의'를 운영해 왔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회복지법인 가교가 전문성과 지지를 갖춘 정이사를 선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때까지 지도감독 권한을 최대한 발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복지법인 가교의 대표이사는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법인 후원금과 산하 시설 보조금을 유용하고 거주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개인금전 부정사용 등의 혐의로 지난 4월 임건태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신봉우 기자

선박 내부 폭발...필리핀인 선원 2명 부상

22일 오후 4시45분께 광양국가산단 원료부두 3선석에 정박 중이던 S호에서 불이 나 필리핀 선원 2명이 화상을 입었다.

이날 사고는 선박 내부 기관실 정비 도중 유압오일 파이프가 폭발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상 선원들은 산단 자체 앰블런스 도움으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지만 이들 중 한 명은 시력에 문제가 생겨 진주의 한 대학병원으로 2차 이송됐다.

해경은 선박 관계자를 대상으로 정확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광양=김충권 기자

동료에 주먹질 사회복지무요원 입건

광주 광산경찰서는 22일 사회복지무요원 동료들 때린 혐의(폭행)로 A(2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9시께 광주 광산구 한 병원 간호사실 앞에서 사회복지무요원 B(22)씨의 목살을 잡고 얼굴을 주먹으로 2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병원 사회복지무요원으로 복무하던 A씨는 '동료인 B씨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계속 쳐다본다'는 이유로 주먹질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 7층에서 근무하는 A씨와 5층에서 근무하는 B씨는 일면식만 있는 사이로, "짜려본다"며 시비가 붙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형택 기자

광주서 80대 노인 열사병 추정 숨져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광주에서 발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80대 노인이 열사병으로 숨졌다.

22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3시40분께 광주 광산구 한 농로에서 A(80·여)씨가 숨져 있는 것을 손녀가 발견했다.

손녀는 경찰에 "발일을 간 할머니가 귀가하지 않아 밭으로 향했다. 밭과 50m 가량 떨어진 농로에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께부터 이웃이 운영하는 농작물 하우스와 자신의 밭에서 일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5년 전부터 지병을 앓고 있었다"는 가족의 진술과 열상이 남아 있던 점을 토대로 열사병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임형택 기자

수입 오토바이로 고속도로 운행 40대 입건

명품 수입 오토바이로 고속도로를 불법 운행하던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22일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회사원 김모(49)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통행 등의 금지)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8시25분께 호남고속도로 상행성 장성IC에서 정읍휴게소 방면으로 40km 가량 불법 주행한 혐의다.

현행법상 오토바이는 배기량과 상관없이 이륜차로 분류돼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도심 속 고속도로 개방구간에 진입해서도 주행할 수도 없도록 규정돼 있다.

올해 광주와 전남지역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불법 운행하다 적발된 경우는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김씨는 경찰에서 "전북 완주 대둔산에 가기 위해 네비게이션이 알려주는 길을 따라 가던 중이었다"며 '단순 실수'를 주장했다.

경찰은 그러나, 김씨가 1종 면허소지자로 도로교통법에 나름대로 배운 데다 실수치고는 주행거리가 너무 길다는 점 등을 들어 입건 조치했다.

김씨가 운행한 오토바이는 1690cc 명품 수입 오토바이로, 해당 가격이 수천만원에 이른다.

경찰 관계자는 "간혹 오토바이 애호가들이 동광주IC에서 용봉, 서광주, 광산까지 고속도로로 내달리는 경우가 있는데 명백한 위법행위로, 사법처리 대상"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정환 기자



부유물 잔뜩 쌓인 불광천 23일 오전 집중호우로 침수된 서울 서대문구 불광천. 산책로에는 비가 그친 후 물이 빠져자 부유물이 잔뜩 쌓여 있다.

장마철 안전취약 건설현장 541곳 사법처리

고용노동부는 장마철 산업재해 위험이 큰 건설현장 949곳에 대해 현장감독을 실시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체 541곳을 적발 사법처리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고용부는 6월5일부터 6월23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붕괴, 침수로 인한 익사와 잠진 등 장마철 대형사고 위험이 큰 전국 949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장마철 건설현장 집중감독'을 실시했다.

고용부는 감독 결과 총 888개 현장의 법 위반사실을 확인해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간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사고위험을 방치한 541곳의 사업주를 사법처리하고, 토사붕괴 등 급박한 사고위험이 있는 221곳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근로자 안전교육이나 건강진단 등을 하지 않은 사업장 704곳의 경

우 시정지시와 함께 과태료 총 22억 5000만원을 부과하고 현장에서 사용 중인 목재가공용 동근톱 등 위험 기계·기구에 방호장치를 하지 않은 24곳에 대해 사용중지 조치를 했다.

고용부는 또 사고가 많은 타워크레인의 안전규칙 준수, 원청 업체가 현장의 안전시설 설치·보조구 구입 등에 사용하도록 하도록 업체에 지급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사용 여부에 대해 401곳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했다.

감독 결과 인양할 수 있는 하중을 표시하지 않거나, 벽체 등 구조물 지지 불량 등 총 110곳의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행·사법 조치를 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잘못 사용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지 않

은 230곳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잘못 사용한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10곳과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지 않은 48곳 등 총 58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조달청을 통해 공공 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시 감점(0.5점)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김광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현장에서 사망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여전히 위반사항이 많아 '건설업 특별대책'을 9월까지 시행하고, 특히 사망재해 중 비중이 높은 추락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8~9월 기획감독을 실시하는 등 건설재해 예방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스

관공서 납품계약 체결 대가 챙긴 60대 징역 2년

관공서 납품계약 체결 성공 대가로 거액을 챙겨 온 60대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이종민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 대해 징역 2년·추징금 5억20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4월 전남 한 기초자치단체가 발주한 사업과 관련,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해 계약을 수주했다'는 명목과 함께 모 업체 대표로부터 1억9793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같은 해 1월 이 업체 대표에게 '해당 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많이 알고 있다. 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부탁하겠다. 성공할 경우 대가를 달라고 제안, 계약 금액의 15~25%를 받기로 업체 대표와 약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2013년 4월30일부터 지난해 11월15일까지 두 개 업체 등으로부터 총 5억2000여만원을 송금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인맥이나 공무원에 대한 친분을 내세워 지자체에 대한 납품계약을 체결해 주는 대가를 받는 행위는 납품업체 선정 등 지자체 구매 관련 계약절차의 공정성이나 공무원의 청렴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해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상당히 커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업계의 관행이었다거나 범죄가 되는 것을 몰랐다는 이유로 관용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주준정 기자



사랑중심·생명중심 교통사고예방 캠페인

당신의 작은 배려가

선진 교통공동체를 만듭니다!

- 운전자를 배려하는 '방향지시등 사용'
- 보행자를 배려하는 '정지선 지키기'
- 통행인을 배려하는 '무단횡단 안하기'

